

시진핑 3기 체제의 출범과 한국외교의 과제

이동률 | 동덕여자대학교 | leedr@dongduk.ac.kr

1. 시진핑 3기 대외전략의 향방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시진핑 3기 체제 구축이 완료되었다. 시진핑 주석의 총서기 3연임은 예상된 결과였다. 그럼에도 정치국 상무위원 6인이 모두 시진핑 주석의 측근들로 구성되고 5년 후 후계 구도는 여전히 불투명하면서 시진핑 1인 체제를 공고화한 것은 예상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정치국 상무위원 7인 구성은 공산당 일당 체제 내에서 과도한 권력 집중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관리하는 최소한의 안전판 기능을 해왔다고 평가되었다. 그런데 새롭게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더 이상 최소한의 권력 분점과 견제 및 균형의 기능마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시진핑 1인 체제는 공고화되었을지 모르지만 중국은 여전히 국내외의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여파로 경제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고 국민들의 불만도 커져 가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탈중국화를 향한 공세와 압박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악화된 중국의 국가 이미지마저 시진핑 1인 체제의 강화로 인해 더 나빠지는 분위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여전히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국가 비전을 국민들에게 역설하고, 국제사회를 향해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떠날 수 없고, 세계의 발전은 중국을 필요로 한다”면서 개혁개방의 지속 추진을 강조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재차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시진핑 1인 체제의 공고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성장을 통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은 더 나빠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진핑 체제의 정당성은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진핑 3기 체제가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서 향후 어떠한 대외정책을 전개할 것인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다양한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권력체제를 완비하고 리더십을 강화한 시진핑 3기 체제는 일단 외형적으로는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고 자신감이 커져 본격적으로 보다 강경한 대외정책을 전개할 것이라는 예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당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한 두 가지 변화된 내용도 이러한 논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우선 2027년 건군 100주년을 겨냥하여 국방 및 군 현대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제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언급되었던 ‘방어적 국방정책’이라는 표현도 사라지면서 보다 강하고 공세적인 국방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에 “대만 독립에 대한 단호한 반대”라는 내용도 명시했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독립 반대와 통일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이다.

반면에 중국이 공세적 외교를 펼치는 것을 제약하는 요소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진핑 1인 체제가 확립되기는 했지만 국내에 신적한 과제를 안고 있고 이들 과제를 해결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이므로 대외적으로 고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공세적 정책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권력자들은 전통적으로 ‘내우외환(內憂外患)’에 기반한 특유의 위기 인식을 지니고 있다. 내우에 외환이 동반되면 권력 기반이 잠식되고 체제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새기고 있다. 내정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제정세의 관리를 통해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진핑 주석은 당대회 보고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국내 문제를 언급하는 데 할애했다. 시진핑 주석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 첨단 기술의 자립, 과학 기술 인재 양성, 민생 복지의 증진, 생태환경의 개선, 공동부유 달성 등 다양하고 복잡한 국내 과제와 목표를 우선적으로 역설했다. 요컨대 시진핑 정부는 우선 경제회복을 조속히 달성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여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시진핑 체제에 대한 비판 대자보가 등장하는 등 내부 불만과 저항도 표출되고 있다. 일단은 강한 통제를 동원해 불만을 덮을 수 있겠지만, 결국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절실하다. 공산당 집권의 중요한 정당성의 근거는 여전히 경제성장에 있다. 다만, 경제성장을 단기간에 실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 중국의 위상을 과시하거나 외부의 적과 위기를 과장하여 이를 기반으로 내부 결집력을 강화하는 대안이 모색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II. 시진핑 체제의 대미외교와 미중관계

미국의 대중 압박과 공세는 시진핑 주석 장기집권의 중요한 정당성의 근거로 활용될 소지가 없지 않다. 시진핑 주석은 실익이 확보되지 않는 선부른 양보나 타협보다는 경쟁 구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국내 결집과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계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대립상황이 고조되는 것은 중국에는 정치·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경제발전을 저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중국에 당장 대응 수단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경쟁을 확대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시진핑 정부는 공개적으로는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진핑 정부가 직면한 국내외의 난제들을 고려하면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는 현실성이 크지 않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면서 점진적으로 대만 차이잉원 정부의 독립 의지를 자극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군사적 위협을 불사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 해협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소통 창구도 열어두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가치, 첨단기술, 글로벌 공급망 등 다양한 수단과 방식을 동원하면서 중국 압박을 향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주도해 가고 있다. 중국도 일대일로를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우군 확대를 위해 전방위 외교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육상과 해상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와 인접하고 있다. 중국이 전통적으로 선린외교를 주창하며 주변 외교를 중요시해 온 지리적 배경이다.

그런데 정작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주요 동맹국과 우방국들에 둘러싸여 안보 불안에 직면해 있고 확실한 우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중국의 주요 우군들마저 최근에는 연이어 사고를 치면서 시진핑 정부는 내우(內憂)에 외환(外患)이 겹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작년에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얀마와 아프간 사태로 당혹스러운 상황을 경험했다. 올해는 다시 러시아와 북한이 연이어 시진핑 외교를 시험대에 세우고 있다. 미국과의 경쟁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있어 러시아와 북한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우군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국은 전략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주권과 영토 존중이라는 중국외교의 핵심 원칙을 훼손할 수는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은 원론적이고 모호한 입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북한은 마치 기다리기도 한 듯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 중국의 안보 딜레마를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북한이 이 계기를 이용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에도 중국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중국은 우군도 절실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가 더 나빠지고 고립이 심화되며 미국과의 대립이 악화되는 것도 피해야 한다.

III. 한국외교의 과제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커져 가고 있고 한국외교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선 미국이 한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대만문제를 지속적으로 의제로 제기하고 있다. 지난 5월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 시작이었다. 낸시 펠로시 미하원의장에 이어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한국을 방문해서 대만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한국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미국에 확장 억제 공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은 대만문제에 대해 한국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 정부에 있어 한국 신정부의 등장은 새로운 외교적 과제이자 도전이다. 시진핑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 재건에 역점을 두고 있는 한국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압박의 국제 연대에 어느 범위까지 참여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은 현실적으로 우군 확보가 어렵다면 미국의 세력 확장을 최소화하는 차선을 선택해야 하는 고민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대만문제 등에서 중국이 상정하는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인식할 때 시진핑 1인 체제하에서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 어느 국가도 북핵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중간에 정상회담과 외교장관 회담이 연이어 열리고 있지만 북핵문제는 대만문제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오히려 북한은 이 틈을 타서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감행하고 미사일 도발을 이어 가면서 담대한 도발로 응수하고 있다. 이 와중에 북중 양국은 긴밀함을 과시하고 있다. 단동-신의주 간 철도 화물 운송이 재개되었다, 북한 외무성이 대만문제에 대한 지지 입장을 칼럼을 발표한 데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중국 건국 73주년 축전에서도 이례적으로 중국의 영토 보전과 통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언급하며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자위대의 활동 반경을 확대하고자 한다.

한국은 북한발 안보 불안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엉킨 다양한 외교 과제의 해법도 찾아야 한다. 미국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야 하고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도 대비해야 한다. 중국과 관계도 살얼음 위를 걷듯 불안하다. 사드문제는 봉합 상태에 있지만, 양국 국민 정서는 더욱 나빠지고 양국관계의 유일한 동력인 경제협력도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대중수출 감소는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본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제는 시급하게 그 해법을 찾아야 하지만 동시에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자칫 서둘러 해결해 보려다 총체적인 난맥상에 빠질 우려도 있다.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종합적인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안보, 경제, 첨단기술, 에너지 문제들도 서로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가동되어야 한다. 국가의 집단 지혜와 거국적 외교 역량을 결집해서 정교하면서도 진취적인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강대국들이 자국 우선주의에 매몰되어 진영을 강화하려는 추세를 이용하여 외교적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을 만들려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시도가 필요하다. 우선 한반도에서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의 출구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전략적 선택지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 스스로가 미중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편협한 외교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견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을 전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돌파구를 한반도 안정에서부터 만들어 가야 한다. 지난 30년간 한중관계에서 안보 차원의 갈등이 심각했던 대표적인 두 번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2010년의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사건과 2016년의 사드 배치와 보복 갈등이라는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북한의 도발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한반도에서의 미중간의 갈등으로 빠르게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 불안은 가중되고 한중관계는 악화되었지만 한국은 마땅한 대응 수단도 방법도 없었다. 즉, 미중간 경쟁과 갈등이라는 거친 파고가 한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북한이라는 변수 때문이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중이 경쟁하고 갈등하는 상황이 오히려 도발을 통해 자신의 입지와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온 것이다.

현재 북한은 장기간의 경제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미중간 경쟁과 갈등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북한은 재차 도발을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기회라 오판할 수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이 발생할 경우 결국 한반도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 구도가 강화되면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은 고조되고 한중관계는 사드 사태처럼 다시 악화될 우려가 있다. 중국도 한국도 국내 정치·경제적으로 어렵고 민감한 상황에 있는 만큼 북한의 도발을 경계하고 있다. 우선 한중 양국이 한반도 안정이라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최소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을 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